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연일 축구경기 관람…이번엔 女축구(4/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함께 여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이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했으며 북한식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해 국가 체육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시를 했다고 전함.
  -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동화 군 중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윤정린 호위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태성·김승연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정치수용소 확장, 대규모 처벌 임박(4/7, 산케이(産經)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이 장성택에 의한 군사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간부 약 200명, 이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주변 간부와 가족 등 약 1천명을 선별해 구속했다고 전함.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16호(함경북도 화성), 25호(청진), 18호(평안남도 북창)에서 부지 확장이나 건물 증설 공사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구속된 약 1천200명이 현재 14호 수용소(평안남도 개천)와 15호 수용소(함경남도 요덕) 수용소 등 5곳에 일시 수용돼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장성택과 관련해 좌천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행방을 감춘 간부가 적지 않아 주요 직위에 공백이 많고 이 때문에 뇌물을 주고 자리를 사는 매관이 성행하고 있으며, 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지도원은 5천~2만 달러(약 527만~2천109만 원)선에서, 지방 관리는 약 5천 위안(약 8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시리아 대사에 장명호 임명(4/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에 따라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에 장명호를 임명했다." 고 밝힘.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평양 집결..내일 회의(4/7, 조선중앙TV;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7일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21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함.
  
- **北 박봉주, 첫 공개연설..."김정은 영도체계 확립"(4/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박봉주 내각 총리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 보고자로 나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국방위원회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념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양형섭·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로두철·김용진내각 부총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기남·최태복·김영일·김평해·곽범기 당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함.
  
- **北, 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조직문제 등 논의(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하에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열려 "당의 영도적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 보강 문제와 조직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인민생활 향상과 부강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힘.
  
- **北 '장성택 측근' 문경덕 해임 확인...김수길로 교체(4/10, 연합뉴스;조선중앙방송)**
  - 북한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경덕이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서 해임된 사실이 10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 추대 평양시 경축대회를 녹음 실황으로 중계하며 "김수길 평양시 당 책임비서가 사회를 한다"고 소개함.
- **北 리일환 평양시당 비서, 당중앙위 부장에 임명(4/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전날 폐막했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꾼, 선수와 감독들, 청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로 활동한 리일환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전함.
- **김정은 재추대한 北, 유일 영도체계 강화 박차(4/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는 사설에서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는 전체 당원과 군 장병, 인민의 의지라고 찬양함.
  - 사설은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며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나아갈 억척 불변의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기념사진(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이날 사진 촬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항일빨치산 1세대인 리을설·김철만,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리용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강석주 전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고위간부가 함께함.
- **北 김정은, 재일동포에 교육비 21억원 지원(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2억780만 엔(약 21억 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 돈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모두 160차례 보냈으며 이는 액수로



473억3천115만390 엔에 달한다고 덧붙임.

● 北 '외교통' 강석주, 내각 부총리서 당 비서로 옮겨(4/13,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 최근 내각 부총리에서 물러난 북한 '외교통' 강석주가 노동당 비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가 이날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함.
- 이는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된 강석주가 당 비서직을 새로 맡게 됐다는 의미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김정은 동향

- 4/9, 김정은 黨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1차 회의 진행(4/9,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최영림,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최부일, 김양건, 김평해, 광범기, 오수룡,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김영태가 수행
- 4/10, 김정은 黨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만수대언덕 김 아버지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4/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최을설, 김철만,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리용무, 박도춘, 강석주, 김원홍이 수행



#### ■ 기타 (대내 정치)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4월7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안북도 광산군에서 진행(4/7,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2012.4.11) 2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4월 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4/7, 중앙통신, 평양방송)
  - 김기남(黨 비서), 김용진(내각 부총리, 개막사) 등 참가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4.9현상주(「직총」위원장/보고)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은 黨 제1비서 추대(4.11)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4.13)2주년 경축모임(당창건기념탑광장)진행(4/9,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21주년 즈음 김정일의 '자주·선군·인덕정치'와 "최대 업적인 영도의 계승문제 완벽해결" 등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업적' 회고 칭송(4/9,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최고인민회의 정령, 4월 13일 폭발물처리 中 사망한 황해남도 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4/13, 중앙통신)
  - 강필훈(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박영호(황해남도당위 책임비서) 등 참가
  - 최용일, 오명수 : 영웅칭호와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유가족들에게 전달
  - 김창일, 임창석 : 국기훈장 제1급 수여

#### 나. 경제

- 北 신문 "과학기술 발전 못하면 '기술식민지노예' 돼"(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사상, 제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의 선봉에 선 전초병들"이라며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밟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안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에네르기(에너지)문제라고 제시함.
- 러시아, 北나진항 통해 석탄 첫 수출(4/10, 자유아시아방송(RFA);모스크바타임즈)
  - 러시아가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 수출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는 지난달 말 서시베리아 쿠즈바스 탄광에서 생산된 9천t을 화물열차로 나진항에 이송하고 배에 선



적했으며 이 석탄은 동해를 거쳐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동부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 이번 석탄 수출은 러시아가 나진항의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러시아 연해주의 하신과 나진항을 잇는 열차 운행과 통관 체계, 화물 하역 등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RFA는 설명함.

● "프랑스NGO, 北노인에 100만달러 식량지원"(4/11,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북한 노인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이 단체는 올해 1월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국제개발청에서 지원받은 100만 달러(약 10억3천만원)을 27개월 동안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북한 조선연로자(노인)보호연맹에 소속된 180명과 양로원 등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7천200여 명으로 전함.

● "캐나다 민간단체, 北에 영양가루 지원"(4/12,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 민간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올해 들어 북한 영유아와 임신 부에게 영양가루 478만 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퍼스트 스텝스 측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영양가루 외에도 메주콩 100t이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수전 리치 퍼스트 스텝스 대표는 '스프링클스'라는 이름의 이 영양가루가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 지역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 학술지, 무역 다각화 강조하며 러시아 주목(4/1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3일 입수한 북한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훈(지난 2월 15일 발행)에 실린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기서 러시아와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논문은 "우리는 러시아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거래를 해온 풍부한 경험과 토대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 특히 원동(극동) 지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 군사

● 북한제 추정 무인기, 엔진 개조해 비행거리 확대(4/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당국 관계자는 7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100~120km로 비행한 점과 삼각형 모양의 기체구조를 볼 때 이들 무인기가 총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8km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으나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30여km떨어진 곳에 추락했기에 북측기환 거리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총 비행거리가 260km넘으며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북한, 평양서 김정은 암살 대비 훈련"(4/8, 환구시보(環球時報))**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달 15일 평양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중앙의 각 기관 및 부문 수장이 모두 참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피습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벌였다"고 8일 보도함.
  - 또한 신문은 "훈련의 목적이 적대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이 최고지도자를 해치는 것을 막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백두혈통'의 승계를 확실히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 전함.
- **北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강필훈으로 교체(4/12, 연합뉴스;조선중앙방송)**
  - 북한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리병삼에서 강필훈으로 교체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인민내무군 경축대회가 11일 열렸다고 이 대회 보고자를 '강필훈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으로 소개함.
- **북한군, 김일성 생일 맞아 김정은에 충성맹세 대회(4/13,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13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병사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경의를 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을 했다고 보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함.
  - 최 총정치국장은 특히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올해 인민군대 사업의 중심 고리로 틀어쥐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콩 농사와 수산, 축산의 3대 열풍을 일으키며 후방사업 전반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겠다"라고 강조함.

#### 라. 사회·문화

- **北 "식생활 문화 개선하자"..다양한 요리축전 개최(4/6~7, 조선신보;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7일 제19차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요리축전'이 지난 2~4일 평양면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소개함.
- 노동신문도 6일 보도를 통해 태양절 요리축전 참가자가 1만여 명을 기록했다며 "요리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인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북중 합작 김정일 밀랍상 北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4/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야전복 차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밀랍상이 8일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개관식에서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이 밀랍상에 대해 "중국 위인납상관 성원들이 온갖 지성을 다 바쳐 김정일 동지 납상을 성의껏 형상하고 조선(북한)창작가들이 장군님(김정일)의 납상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더 잘 형상 완성했다"고 설명함.
- 개관식에는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외에도 중국 측에서 류홍차이(劉洪才)주북 대사와 위인납상관장이 참석함.

● **유엔인구기금, 北임산부 의료지원에 25만달러 투입(4/9,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서 받은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를 북한 임산부 의료 지원에 사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보도함.
- 아리에 허크만 UNFPA 북한 사무소장은 RFA에 지난해 홍수 피해를 본 지역의 보건시설 30여곳에 임산부 응급약과 출산용품 등의 지원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올해에도 1만 8천 명의 북한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임.

● **"北 슈퍼마켓·맥줏집에 포인트 카드 등장"(4/10, 조선익스체인지)**

- 10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 창전거리에 있는 '해맞이식당'에서 손님이 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가 생겼다고 전함.
- 이 식당은 '전자봉사카드 소개'라는 안내문에서 "창전 해맞이식당과 분점들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 받는 손님들은 지불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전자봉사카드에 적립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전자봉사카드를 슈퍼마켓과 빵집, 맥줏집에서 쓸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조선익스체인지는 낙원백화점이 몇 년 전 평양에서 포인트 카드를 처음 도입한 상점이라고 전함.



### ● 北 모란봉악단 작곡가 3명에 '노력영웅' 칭호(4/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12일 정령을 통해 모란봉악단 소속의 작곡가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마치고 낮이 새겨진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13일 보도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들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예술성이 강하고 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을 담은 명곡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천만 군민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함.

####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를 옥류아동병원에서 진행(4/7, 중앙통신)
- 평양에서(형제산구역, 하당닭공장)3.21'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 발생(리경군, 농업성 국장), 현재 전국으로 계속 확산에 따른 "전국에 조류독감비상방역 선포" 등 방역대책 주력(4/9,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 4.9 혜산시(양강도 순회공연 中)공연개막(도예술극장)선전(4/9, 평양방송·중앙통신)
- 제5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4.9~11),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4/11, 중앙통신)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 4월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4/11, 중앙통신)
  - 김기남(당중앙위 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용진(내각 부총리), 차희림(평양시 인민위 위원장), 한철(문화성 부상/개막연설) 참가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반적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등을 소개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선전(4/11,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 4월11일 양강도 순회공연 마치고 혜산에서 출발(4/11, 중앙통신)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 北 통신 "美, 南에 무기 팔아 핵전쟁 준비" 비난(4/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남한에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 비난함.
- 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인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가 "미국의 핵전쟁 전략 실현에서 핵심수단들"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첨단 전쟁장비로 괴뢰(남한)를 완전무장시켜 동족과의 새로운 전쟁, 제2의 조선전쟁의 일선에 내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최근 미국의 전략기들 속에서 '북조선 붕괴'에 대비한 전쟁계획들은 완성됐지만, 남조선의 군사장비들은 이 선제공격 요구에 따라서지 못한다는 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우연치 않다"며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의 판매로 "새 전쟁 도발의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완성"하려한다고 주장함.

### ● 北 신문 "과거청산이 북일관계 정상화 선결조건"(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법적,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무리아마(村山)담화에 대한 수정 논란이 생긴 것을 언급하며 "과거청산이야말로 조(북)일 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엄청난 정신도덕적·인적, 물질 피해를 입히고서도 시치미를 떼는 일본과 막대한 재난을 당하고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한 우리 공화국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라며 "조일 관계 개선 문제가 해결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역사적 미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함.

### ● 北노동신문, 美 MD체계 비난... "군사적 패권 계산"(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거론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신문은 "문제는 미국이 판에 박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 대면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운운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함.

### ● 北, 남북자 재조사 의향전달... 日 제재완화 검토(4/10, 니혼게이지이 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에 밝혔다고 니혼게이지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5-6일 열린 외교 당국자 협의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가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



도항 금지)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이 재조사에 응하면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일본 측이 협의에서 밝히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납치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한 조사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한 역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응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함.

● **北 국방위 "美 '적대정책' 계속되면 대응조치 할 것"(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1일 미국이 남한의 미사일에는 눈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다며 이중기준에 따른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함.
- 국방위는 11일 발표한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한에서 지난달 진행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나 자위적인 로켓 발사 훈련에 대한 대응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미국의 날강도적인 이중기준에 따른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끝장내기 위한 자위적인 대응조치들을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美 이지스함 日 배치계획 비난... "무력증강 책동"(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을 구실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증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6일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 실현을 위한 무력증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밝힘.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재추대 축하' 축전(4/13, 조선중앙방송)**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지난 11일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라며 "나는 형제적 조선 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밝힘.
- 그는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것이며 우리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중국 측은 조



선 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국제기구, '사전 통보없는 미사일발사' 北에 문제제기(4/13, 연합뉴스)

-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일 북한 민항 총국장에게 이번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피영향국에 알려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시 사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비행체 발사 시 사전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코지 세키미즈(關水康司) 사무총장 서한을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발송했다고 뉴스는 전함.

#### ■ 기타 (대외 일반)

- 김일성 생일에 즈음한 北문화전람회, 4.3~6 베이징에서 진행(4/8, 중앙통신)
- 김영남, 4월 10일 駐北 헝가리 대사의 신임장 접수 후 담화(4/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3월 30일 日당국의 총련 탄압 규탄 성명 발표(4/10, 중앙통신)
- 팔레스타인 대통령, 4월11일 김일성 생일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4/11, 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단장:김철성 제1부위원장), 4월 1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4/11, 중앙통신)
- 北 대표, 유엔 군축위원회 연례회의(4.7)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위협공갈로 일관된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우리(北)의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도발·위협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연설(4/12, 중앙통신)
- 타지키스탄(4.8)·미얀마(4.4)·우간다(3.26)대통령,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 102주년 즈음 각각 축전 발송(4/12, 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박해철 「총련」 부국장), 4.12 평양 도착(4/12,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 중앙위, 4월 13일 멕시코노동당 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4/13,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석주(黨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黨비서, 연설), 박근광(黨 부부장) 등 참가
- 박춘일(駐팔레스티나 北대사), 4월10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4/13, 중앙방송)



##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핵억제력 없으면 수모와 비극 겪을 것"(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7일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장문의 정론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함.
  - 신문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는데 대해 "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 그 어떤 강압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안정되고 정이 넘치던 우리의 사회주의 요람은 엄청난 파산에 직면하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러 "한미, 북핵 해결에 '무력 우선' 중단해야"(4/10,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력사용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외무부는 10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특히 긴장완화 분위기가 상호 비방전과 정면 대립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8일 까지 계속되는)대형 군사훈련 폴이글(Foal Eagle)을 펼치면서 한국과 미국이 기록적인 규모의 항공기를 동원한 새로운 공군력 훈련에 돌입했다"며 "이는 가상 적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을 연습하고 적 배후에서 작전하는 전복세력을 지원하는 훈련이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함.
  - 외무부는 또한 "모든 논쟁 여지가 있는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황준국 "北 엄중한 상황, 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4/1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고 추가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간에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
  - 황 본부장은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 핵 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하며 그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힘.
  
- **北, 한미일 6자수석 회담 비난..."비핵화와 반대방향"(4/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미국에서 최근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오히려 조선반도(한반도)의 사태 발전을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대해 "서로 마주 향해 인사도 하지 않으려는 손이래 동맹자들(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해 미국은 공연히 우리 문제를 3자 회합의 의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한중 6자수석, 한반도 정세·6자재개 문제 논의(4/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자 회동을 하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 및 만찬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났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2일 밝힘.
- 주중대사관은 "양측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고 우려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측은 북한의 도발, 특히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도발 억지를 위해 상호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南, 관계개선 바라면 비방중상 중지해야"(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집권보수패당은 그 무엇으로서도 비방중상의 중지에는 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난폭하게 짓밟으면서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 속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우리에 대한 괴뢰패당의 갖은 악담들과 도발적인 망동은 뱃속까지 들어차 있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 병적 거부감의 필연적 산물이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고 북남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함.

● **北, 南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 "미사일에 는 미사일로"(4/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과학원은 7일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괴뢰패당은 더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할수 없게 되었



고 유엔 안보리사회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 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한 "만일 북반부의 어느 지역에 미국 미사일이건 괴뢰 미사일이건 한 발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적 본거지를 무자비한 미사일 세계로 불마당질하여 흔적도 없게 쓸어버릴 것"이라며 남측에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함.

● **北, 南 미사일 발사 연일 비난.. "한반도 긴장 부채질"(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기 창피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군이 지난달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사일 선제타격을 노린 책동"이라고 주장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대해 '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새로운 '제재'까지 가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가"라고 비난함.

● **北통신 '어선 나포' 비난.. "인도주의 논할 자격 없어"(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에만도 인도주의와 상반되는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해온 그들(남한)은 사실상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도 없다."고 밝힘.
- 이 통신은 또한 "대통령'이랍시고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면서 우리의 '인도주의'와 '인권'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횡설수설할 때 수하 줄개들은 안에서 동족의 선원들을 강제 납치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함.

● **北통신, 南미사일개발 비난... "외세 추종 동족살인극"(4/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논평에서 우리 군이 최근 사거리 500km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과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했다는 보도 등을 거론하고 "외세에 추종해 순전히 동족말살을 전제로 감행되는 동족 살인극"이라며 "싫 지고 불 속에 드는 경거망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밝힘.
- 또 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미제 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언제 한번 동족을 겨냥하거나 남조선 전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비난.. "흡수통일 논리"(4/12,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구상을 밝힌 장소로



독일 드레스덴을 택한 데 대해 "도이츨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늘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폄훼함.

● 北단체, 한미 공군훈련에 "본거지 초토화" 위협(4/12,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에서 맥스선더 훈련 기간 "남조선 상공을 뒤덮을 100여 대의 비행기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공화국을 향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여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핵미사일을 미친 듯이 쏘아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불은 불로 다스리고 도발자들이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기질"이라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현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고 덧붙임.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관련 남북대화에도 소극적(4/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2월 시작된 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뜻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는 상태"라고 밝힘.

● 정부,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4/9, 연합뉴스)

-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 '섬김'이 신청한 함경북도 나선 지역 산원(산부인과 병원)에 기저귀, 기초 의료용품 등 1천700만원 어치 상당의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힘.
- 올해 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총액은 19억5천만 원으로,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북제재 차원에서 시행된 5·24조치와 상관없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임.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의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이명박 정부 후반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51억원에 그쳤으나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간접적인 대북지



원 규모는 2011년 65억원, 2012년 23억원에서 2013년 135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전함.

● '실종 북한 선원추정시신 신원확인 北에 요구(4/11, 연합뉴스)

- 지난 4일 전남 여수 외곽 공해에서 침몰한 몽골선적 화물선 실종자 수색 구역 안에서 8일 북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정부는 11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인양된 시신 사진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보내 침몰한 북한 화물선 선원이 맞는 지 확인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5·24 해제, 北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4/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면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는 11일 류길재 장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기타 (대남)

- 박 대통령의 '北 경제난' 등 언급(독일 드레스덴)과 통일부 장관 및 외교부 장관의 對北 발언들(약속 불이행시 국물도 없다, 도발에 여념이 없다)을 거론하며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남북합의 내용을 존중,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4/7, 중앙방송, 노동신문)
- 김일성저작(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21돌(1993.4.6)을 맞으며 '韓美의 반통일책동이 강화될수록 단결의 힘, 단합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온 민족의 대단결로 내외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고 선동(4/7, 중앙통신, 노동신문)
- 남한의 '무인기소동'은 '괴뢰호전광들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하여 저들에게 날아드는 내외여론의 비난과 조소, 야유를 모면해보려는 알팍한 오그랑수'라고 중단 주장(4/9,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등 '北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민족반역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히스테리적 망동, 자가당착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4/9, 중앙통신)
-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北이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꾀다)에 대해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꾀 것은 北이 아니라 南당국'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자신부터 입 건사를 잘하고 제 집안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4/11, 중앙통신·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韓美, 일·북 비밀접촉 우려... '투명성' 주문(4/9, 연합뉴스)

-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측의 황준국 수석대표와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수석대표가 한미일 북핵 회담에서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수석대표로부터 일·북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비밀접촉 상황을 우려, '투명성'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 이하라 수석대표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이해와 지지가 있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는 일본의 움직임이 비핵화와 관련한 대북압박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일본은 국내정치 사안이라는 이유로 독자적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 韓美日, 北에 사전조치 유연성있게 적용 검토(4/9,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으며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언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 이는 한미일이 북한에 적용해온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단계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놔야한다"고 강조했다.

##### ● 中우다웨이, 조만간 방미... 6자 재개방안 모색 주목(4/10, 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음.
- 지난달 17일~21일까지 평양에 다녀온 우 대표는 미국 측에 미·북간의 중재안 제시를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동안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



조치와 관련 중국 측의 중재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상의 '+@'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이후에 해당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나. 미·북 관계

##### ●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수 부족 문제 겪어" <38노스>(4/8,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7일(현지시간) "최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냉각수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자칫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주목되고 있음.
- '38노스'는 영변 핵시설 원자로의 규모를 고려할 때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방사능 유출은 주변국을 공포와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 ● 베넷 랜드 硏 연구원 "北증폭핵분열탄 실험할듯"(4/8, 연합뉴스)

-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20kt(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증폭핵분열탄(boosted device)'을 이용해 더 큰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는 폭발의 규모가 지난 3차례의 핵실험(1차:1kt, 2차:2~6kt, 3차:5~15kt \*추정)보다 크다고 예측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역량을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 과시하고 한미 양국에 대한 억지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다. 중·북 관계

##### ● 中 "북핵실험 반대"...지재룡 北대사 초치한 듯(4/8, 연합뉴스)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8일,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중국주재 지재룡 북한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반대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전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압박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지 대사 초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현재



의 형세 하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정세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즉답을 회피했음.

#### 라. 일북 관계

##### ● 北, 남북자 재조사 의향 전달...日 제재완화 검토(4/10, 연합뉴스)

- 1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지난 5~6일 열린 외교 당국자 협의에서 일본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북한은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제재는 조총련 간부가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도항 금지'로 일본은 북한이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에 응하면 그와 같은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으며 실무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신문은 북한과 일본이 이달 중 다시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합의하는 절차를 구상 중이며 일본의 이와 같은 대북 제재 완화가 대북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미국이나 한국과의 연대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 동북아 외교 고립 아베, 북한 카드 활용<美전문가>(4/11, 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데니스 헬핀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아베 일본 총리가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2002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인정했을 때 아베 총리가 관방 부장관으로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하며 "동북아 내 첫 양자회담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또한 일각에서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을 비판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이 납북자 사안에 대한 협력 약속을 저버렸던 것을 감안하면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음.

#### 마. 러북 관계

##### ● 러시아, 北 나진항 통해 석탄 첫 수출<美방송>(4/10, 연합뉴스)

-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석탄 9천t을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수출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10일 보도했음.
- 이번 석탄 수출은 러시아가 나진항의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러시아의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열차 운행과 통관 체계, 화물 하역 등의 최종 검



점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석탄은 동해를 거쳐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동부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 러시아와 북한은 하산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50여km 철도 구간을 5년의 개보수를 거쳐 작년 9월에 재개통했으며 러시아의 관련 기업은 나진항을 통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바. 기타

### ● 유엔 北제재위, '北미사일 문제에 우려 표시(4/10, 연합뉴스)

- 1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음.
- 다만 이날 회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위원회의 첫 회의여서 위원회 소속 8개국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음.
- 유엔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북한제재위도 같은 연장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 유엔 北인권위 '김정은 ICC 회부 적극 추진'(4/10,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음.
-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ICC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다만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정부의 ICC 회부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미국 "한국, 최신 공대공미사일 구매 요청"(4/9, 연합뉴스)

- 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



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으로의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76기 등에 대한 판매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특히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 시에는 철저히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임.
- DSCA는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한국군 현대화 및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역내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공군, 역대 최대 규모 공중 종합훈련 실시(4/10, 연합뉴스)

- 공군작전사령부는 10일, 한미 양국 공군이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전데' 훈련을 1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 공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 103대의 항공기와 1천4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가상 전투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군은 적의 도발원점 정밀타격 훈련을 하고 수송기들은 적의 중심에 침투해 임무 중인 특수부대에 물자를 보급하는 연습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훈련을 주관한 공군작전사령부 조덕구 연습훈련처장(대령)은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공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中, 21~25일 국제관함식 개최...한국군함도 참가(4/9, 연합뉴스)

- 중국군이 해군 창설 65주년을 기념해 21~25일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정부는 인천함(2천300t)과 문무대왕함(4천400t급)을 보내기로 했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9일 전했다.
- 한편 일본은 국제 관함식과 함께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 참가국 중 유일하게 초청받지 못했으며 미국도 자국의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국제 관함식'이란 외국 군함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는 해상에서의 군함 사열로 국가 간 군사교류와 다자간 안보 협력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종의 국가급 행사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선상사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교육장관 발언수정..."무라야마답화는 정부 견해"(4/8, 연합뉴스)



- 시모무라 일본 문부상이 "무리아마 답회는 1995년 8월 각의결정 됐기에 교과서 검정 기준상의 '정부 견해'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언한 "정부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사실 오인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전했다.
- 지난달 26일 시모무라 문부상은 "(교과서에 기술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키는데, 고노 답화와 무리아마 답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 측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음.
- 그는 앞서 지난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통일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을 유도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가해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술되게끔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한국 등에서 제기됐었음.

#### ● 韓美日 안보기밀 공유각서 교환 검토 <日신문>(4/11,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이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지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 기밀 공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방 기밀에 관한 정보교류 및 보전 규칙을 정한 각서를 교환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난 2012년 동 협정의 체결이 추진됐으나 한일 관계 악화와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음.

#### ● 한일, '軍 위안부 국장급 협의' 16일 서울서 개최(4/13, 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한국과 일본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협의 의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필요성 강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됨.
- 당초 협의 의제와 관련, 한국은 군위안부 문제만을 거론한데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해옴에 따라 의제를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음.

#### 라. 미·중 관계

#### ● 미·중, 방공구역·동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충돌(4/8, 연합뉴스)

-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문제와 동·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했음.

- 헤이글 장관은 중국 국방부장에게 "중국은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으며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과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창 중국 국방부장은 일본과 갈등을 야기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중국은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격,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은 헤이글 장관 관련 기사를 소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양국 관계를 더욱 존중하라고 촉구했음.

#### ● 캠퐀 美 前차관보 "中 지도부, 대북 불안감 고조"(4/9, 연합뉴스)

- 커트 캠퐀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한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향후 중국의 대북 원유 및 식량공급과 경제관계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근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에 대해서는 "영변에서 생산하는 제한된 핵 물질 외에 다른 소스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이는 "북핵 외교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 中 극초음속무기 개발, 美 군사전략 중대 고비(VOA)(4/10,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9일(현지시간), 최근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무력화를 위해 최대 속도가 음속의 10배(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군사 전술·전략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에 미 국방부 관리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방 관련 전술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며, 앞서 지난 3월에도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차관이 중국의 신무기는 미국의 MD 전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미국도 지난 2010년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 실험에 성공하는 등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중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신무기 개발운용에 대한 대화 채널 구축의 건의가 나오고 있음.



- **헤이글, 시진핑 면담...양국 갈등 봉합 국면(4/10,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9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다고 보도하며, 시 주석이 "갈등과 모순 등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신형대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 이에 헤이글 장관은 "이번 방중의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한 신형대국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하며 미·중 양국이 적극적이고 솔직하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음.
  - 앞서 헤이글 장관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문제와 동·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헤이글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

#### 마. 미·일 관계

- **주일 미대사관 간부, 軍위안부 해결 중요성 강조(4/9, 연합뉴스)**
  - '무라야마담화 계승발전모임'의 공동대표인 아사노 겐이치 도시샤 대학 교수는 9일, 다나 웰튼 주일 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모임의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도덕과 인권의 문제라며 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 또한 웰튼 공사참사관은 '전쟁 미화' 논란을 일으켜온 야스쿠니 신사 경내의 전쟁박물관 유숙간(遊就館)에 대해 좁은 시야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 야스쿠니 신사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모임 관계자가 전했다.
  - 한편 무라야마 모임은 이날 주일 미 대사관에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 대사관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日민주당 대표, 워싱턴에서 '역사 수정주의 반대'(4/9, 연합뉴스)**
  - 일본 민주당의 가이에다 만리(海江田万里) 대표는 8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일본 정치와 미일 동맹의 미래에 대한 조망' 세미나에서 "역사 수정주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 일본 내의 극우 성향 발언에 대해 반성과 견제의 뜻을 피력했음.
  - 또한 가이에다 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한국,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비난, "민주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토대로 성립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 바. 마러 관계

### ● 美 이지스 구축함 흑해 진입<러 언론>(4/9, 연합뉴스)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8일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와 미국 해군 소속 미사일 구축함 '도널드 쿡(Donald Cook)'이 흑해 해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 이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상황 악화를 고려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 앞서 CNN 방송은 도널드 쿡 함이 10일 이전에 흑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미 해군은 도널드 쿡 함을 유럽 지역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페인에 주둔시켜 왔지만 당분간은 흑해에 머물면서 나토 회원국 함정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 중일 관계

### ● 중국 '일제 731부대' 유적 관리한다...종합계획 수립(4/9, 연합뉴스)

- 신화망(新華網)은 9일 중국 당국이 일제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 관련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이용하기 위한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 지난 2012년 11월 중국 국가문화유산국은 731부대 유적을 자국의 세계문화유산 예비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19년까지 731부대 유적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려는 중국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임.
- 일제의 대표적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 해부 실험과 냉동 실험 등을 자행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와 같은 731부대의 잔학 행위를 알리는 전시시설 추가 건립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연말께 상영할 계획임.

### ● 중국 "자원 빼앗기고 있다"...해양분쟁 강경대응 예고(4/12, 연합뉴스)

- 1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전날 공산당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주변 해양 형세와 권익수호' 강연에서 "해양자원을 빼앗기고 섬과 암초를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고 말해 해양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음.
- 류 국장은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필리핀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아옌인(중국명 런아이자오)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중국 관할 해역의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 중러 관계

- 러시아 외무장관 15일 방중...우크라·북핵 논의할 듯(4/9, 연합뉴스)
  - 9일 중국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5일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중 목적과 의제 등은 설명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국제무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등에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 이후 국제무대에서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 형성과 관련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예상됨.

#### 자. 기타

- 日, 플루토늄 추가 비축할 듯...핵 우려 조장(NYT)(4/10,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량의 핵물질을 인도하기로 한 일본이 핵연료 재사용 명분으로 비축 플루토늄을 더 늘릴 것으로 예측, 이 플루토늄은 추가 가공을 거치면 핵무기에도 쓰일 수 있어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아베 정권은 일본의 에너지 주권을 수호한다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일 핵연료 재추진 현행 유지 등에 관한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각의 의결할 예정임.
  - 일본은 3월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정부의 핵 비확산 기조에 협력한다는 명분 아래 핵물질 수백kg을 미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10여일 만에 플루토늄 추가 비축 방침을 밝혀 이웃 국가들과의 안보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텔레토비' 북한 인방극장 스타될까(4/7, 한국일보)
  - 북한이 국영TV로 주민들에게 방영할 해외 프로그램 최종 후보에 영국 BBC 방송의 '팅키윙키'와 '닥터후', '탐기어'를 선택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6일 보도함.
  -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BBC는 개방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TV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계획을 영국 외무부의 협조 아래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왔음.
  - 북한 현지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게 우선인 만큼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북한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
  - 프로그램 공급 협상은 영국 외무부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협상팀 사이에 진행됐으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은 각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를 평양에 전달했고,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은 양측 관계자 접촉을 주선함.
  - 그러나 인디펜던트는 양측의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방영 확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 BBC는 북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최종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 北통신 '어선 나포' 비난..."인도주의 논할 자격 없어"(4/8,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관계의 인도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 해군의 북한 어선 나포 사건을 거론하며 남한이 인도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음.
  - 중앙통신은 이날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이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에만도 인도주의와 상반되는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해온 그들(남한)은 사실상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도 없다"고 밝혔음.
  - 중앙통신은 "'대통령' 이랍시고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면서 우리의 '인도주의와 '인권'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횡설수설할 때 수하 줄개들은 안에서 동족의 선원들을 강제 납치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함.
  
- 코트라 "러 파견 북 근로자 텐트 생활"(4/8, 자유아시아방송)
  - 코트라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임시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힘.
  -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북한 근로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건설 현장을 조사한 결과, 2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



인고 전환.

- 또한 이달 초 러시아 아무르주 검찰청 토탄스키 지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건설사에 거액(40만 루블,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 코트라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사법당국이 북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러시아 고용주에게 직접 요구한 사례로 기존 관례와 다르다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음.
- 한편, 코트라는 러시아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기준으로 2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5% 이상이 극동 연해주에 체류중이며 아무르주에도 1천5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 ● 북, 결핵만연 사상 첫 주민건강검진 실시(4/9,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결핵치료와 예방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 할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 당국이 결핵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주민건강검진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지난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으며 북한보건당국은 평양 인민대 학습당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올해 결핵퇴치를 위한 투쟁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북한의 언론도 결핵퇴치를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을 적극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전역에서 "결핵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이 전례 없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 내부 소식통들이 밝혔음.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의 각 시, 군들에서 모든 주민들을 상대로 의무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지금껏 북한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은 많아도 주민들을 상대로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이번 건강검진은 청진기를 통한 진찰부터 혈액검사, 렌트겐(X레이)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검사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들부터인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결핵과 함께 영양실조 여부에 대한 진단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함.
- 또 다른 소식통도 "기존의 '결핵과'를 '호흡기 내과'로 이름을 바꾸었다며 건강검진 결과 결핵환자로 의심되면 '이소니찌드(이소니아지드)'를 처방 받는다"고 말하면서,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각 지역 '인민병원'과 '제3예방원(결핵예방원)'에는 전기를 정상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함.

#### ● 북한서 1년 만에 조류독감 발생(4/10, 미국의 소리)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21일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하당 닭공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며 "다른 닭공장에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9일 보도했음.

-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H5N1 형으로, 지금까지 수 만 마리의 닭이 폐사하고 살처분 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비상방역을 선포하고 발생 지역을 차단하며, 감염 조류들을 살처분 하는 등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 영 보고서 "북, 조직적인 인권유린 만연"(4/10,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무부는 지난 한 해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태를 분석한 '2013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장애인의 권리에서 미미한 개선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 등 주민의 기본권이 여전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가 계속해서 영국의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영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 개입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음.
- 또한 영국 정부는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영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성 관리들에게 영국의 감옥이나 특수학교 등을 견학하도록 하고, 영국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의 관료들에게 영국의 사법체계와 정치제도 등을 배우도록 했다고 밝힘.

#### ● 북, 영재학교 대폭 늘려(4/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평양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각 도마다 1개씩만 운영하던 수재학교를 최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학교와 멀리 떨어진 군 단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던 기숙사는 폐지된 것으로 보임.
- 수재학교인 '1고중'이 증가하면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1고중' 입학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군 단위 지방학생들은 숙식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오히려 '1고중'에 들어가기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북한당국은 모든 학교의 수업료가 무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의 모든 고등중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세외부담금이 적지 많으며, 더구나 '1고중'은 일반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금이 많은데다 학생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다 보니 '1고중'은 자연스럽게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음.
-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중앙대학(평양소재대학)은 물론 지방의



4년제 대학들도 입학폰트(쿼터)가 1고중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고중 입학이 좋은 대학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고중'을 나오면 군입대를 면제받고 곧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재학교 입학이 커다란 특권의 하나였으나, 최근 1고중이 많이 늘어나 1고중을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바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함.
- 북한은 앞으로 지방의 군 단위 도시에서도 제1고등중학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조총련에 교육원조비 21억 지원"(4/13, 데일리NK)

-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15)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2억780만 엔(약 21억 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음.
- 통신은 이 돈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모두 160차례 보냈으며, 액수로 473억3천115만390 엔에 달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은 지난해에도 태양절을 앞두고 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억9천830만 엔을 지원했음.

2. 북한인권

● 北, 張일파 1200명 구속 3개 정치범수용소 대폭 증설... "핵시설 건설 등 가혹 노동 강요"(4/7, 조선일보)

- 일본 산케이 신문은 7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과 관련, 간부와 가족 등 1200여 명을 일제히 처벌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의 시설을 증설하고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한 소식통들을 인용, "부지 확장과 건물 증설 공사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함경북도 화성(16호), 청진(25호), 평안남도 북창(18호) 등 3개 수용소"라고 전했다.
-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대규모 내부 수사에 착수한 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일파의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노동당과 인민군간부 등 200여명과 이들을 추종한 주변 간부와 가족 약 1000명을 선별해 신병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짐.
- 신문은 구속된 1200여 명이 평안남도 개천 14호와 함경남도 요덕 15호 등 5개 수용소에 일시 수용됐다고 밝힘.
-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인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00명 중 대부분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그동안 장성택의 측근과 직계 친족의 처형, 북중 무역 종사자와 탈북자 가족의 추방은 알려졌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일제히 처벌하는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수용소 확장 규모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케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3월말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박해와 납치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지도자 등의 형사책임 추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해 강제수용소를 이용한 '공포정치'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장성택 일파 숙청과 관련, 좌전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행방을 감춘 간부가 적지 않은데다 정권의 간부가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주요 직위에 공백이 발생해 뇌물을 주고 직위를 사는 매관도 횡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함.
- 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지도원처럼 돈이 되는 자리는 5000~2만 달러(약 526만~2104만원)선에서, 지방 관리는 약 5000위안(약 84만원)에 직위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식통은 "공직에 나가면 뇌물을 받아 챙길 수 있어 1주일 만에 본전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음.

#### ● 북한인권 상황 기록·보존기구 UN 유치 촉구(4/7, 대한변협신문)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힘.
-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각종 증거를 생산·보존하게 될 현장기반조직을 태국이나 한국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상징적인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의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이 조직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스웨덴 단체, 북 인권 고발 행사(4/7,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지난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에 참가해 12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함.
- 이 단체의 그렉 스칼라티우(Greg Scarlatou) 사무총장은 '시민의 권리 옹호자들(Civil Rights Defenders)'이라는 이름의 스웨덴 인권단체가 지난 1일부터 4일에 걸쳐 진행한 국제행사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발표했다고 전함.
-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과 보고서



내용, 정치범수용소, 성분제도, 핵개발과 주민들의 기아 등 수 많은 북한 내 인권문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통된 점이 많다는 것과 인공위성과 탈북자 증언을 비교분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믿을만한 연구에 사용한다는 것,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북한의 살해 위협, 남한으로 망명한 고 황장엽 전 노동당 서기에 대한 암살단 남파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힌.
- 한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사회(ISHR: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도 지난 주말 본(Bonn)에서 열린 국제인권 행사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여성의 인권유린에 관한 강연을 개최했음.

#### ● 로버트 킹 美특사 "안보리, 내주 北인권문제 논의"(4/7,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의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음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COI는 북한 인권 문제 조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면서 "COI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는 아주 강력한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또한 "뉴욕의 (유엔) 안보리에서 다음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비공식 협의 방식인 '아리아 방식'을 통해 오는 17일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임.
- 킹 특사는 "북한 말고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킹 특사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석방을 위해 여러 차례 방북 시도를 했다가 무산된 것과 관련, "(현재)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북한에) 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배씨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배씨 사면을 계속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함.

#### ● 與정책위의장-킹 美특사 北인권문제 논의(4/8,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이제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단순히 한미 양국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정



말 어떻게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협력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함.

-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유 의장 등이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와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영국 "북 종교 탄압, 전 세계가 주시"(4/8,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8일 영국 하원에서 기독교인 박해 등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주민의 인권 탄압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으며, 양자, 다자간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힘.
- 스와이어 부장관은 8일 열린 영국 하원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연합당(DUP) 짐 세넨 의원의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과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또한 다음달 개최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의 기독교인 강제구금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노동당 프랑크 로이(Frank Roy)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 측에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임.
- 보수당의 도미니크 라브(Dominic Raab) 의원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 등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을 방조하지 못하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중국측에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응답함.
- 스와이어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지난달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국가 차원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한국 '유엔 北인권사무소' 유치 포기(4/8, 조선일보)

- 유엔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을 위해 아시아에 설치기로 한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를 우리 정부가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고 말했음.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주임무가 탈북자 조사인 5명 내외의 소규모 사무실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북한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안팎에선 "남북 관계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북 인권 개선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음.

- **정부 "北인권사무소 설치, 유엔 요청시 적극 검토"(4/8,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현장 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 문제와 관련,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음.
  -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함.
  
- **輿의원 55인, 유엔 北인권사무소 유치 촉구(4/9, 연합뉴스)**
  - 새누리당 북한인권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과 국회 인권포럼 간사 홍일표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55명은 9일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음.
  -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측의 적극적인 북한인권사무소 제안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외교부의 태도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신호로 비친다고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기록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설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또 "정부는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불필요한 단서를 달 게 아니라 당장 OHCHR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북한인권사무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음.
  
- **케리 미 국무장관 "북한 인권 상황 세계 최악"(4/9, 미국의 소리)**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나치 독일정권 이래 최악이며 전세계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함.
  - 케리 장관은 8일 국가안보와 외교 우선순위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전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거듭 지목했음.
  - 시리아의 극심한 인권 유린 실태를 열거하던 중, 전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한 유일한 나라로 북한을 꼽음.
  
- **로버트 킹 미특사 "北정보봉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4/9,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북한의 정보 봉쇄 및 통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킹 특사는 "우리는 북한 정부가 독점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를 깨야 하며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건, 현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북한 정권이 8만~12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을 방대한 수용소에 가둬 놓고 이들이 강제노역이나 비인간적 여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의미 있는 통일을 이루려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북한 내부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어서 한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한다는 점을 반영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COI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장성택 처형사건과 관련, "제가 들은 게 하나 있는데 평양의 한 식당에 외국인 등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장성택 공개처형이 방영됐다고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식당 사람들은 일순 침묵했다. (북한 주민들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런 공포심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여건 때문에 탈북도 굉장히 쉽지 않다. 탈북했을 때 국경 근처에만 가도 총살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문제와 관련, "북한이 처음에는 배씨 사건을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따르는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이를 어느 정도 연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방북 의사를 밝힘.

#### ● 분단 경험 독일인, 북 인권개선에 큰 관심(4/9,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사회(ISHR: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가 지난 주말 개최한 제 42차 연례인권회의(the 42nd Annual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Conference)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림.
- 이 단체의 마틴 레센틴(Martin Lessenthin) 이사장은 독일 등 세계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 ● 에드 로이스, LA서 북한인권 강의(4/9,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인권 유린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미국 내 인권 운동과 북한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외교위원장이 연사로 참석해 어린 학생들과 인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눔.

- 로이스 위원장은 아직도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세계로 탈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제3국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특히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탈북자들의 연령이 젊어지면서 이들이 미국 등 자유세계에서 새롭게 공부하고 북한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음.
- 이들이 공부하며 북한 체제의 모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세계에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북한의 실태를 증언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 외교부 '北인권사무소 유치' 소극적 태도에 비난 쇄도(4/10, 데일리NK)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4개 단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유치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성명은 이어 "정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아니라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당연히 먼저 요청해야 했다"며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상징성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유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함.
-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4개 단체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타의 유엔 기구들은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이다"고 지적했음.

● 외교차관 "北무인기, 정전협정채널로 문제제기 검토"(4/10, 연합뉴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윤병세 "北 4차핵실험시 상상할수없는 대가치를것"(4/1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 "유치 못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와 관련 국가에 한국 유치를 찬성하는 분위기로 나가면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발언함.

● 유엔 北인권위 "김정은 ICC 회부 적극 추진"(4/10, 연합뉴스)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10일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한다고 소개했음.
- COI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
- 다만 다루스만은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ICC 회부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임.
- 그는 "(김정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음.
- 마르주키는 아울러 1970~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새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이며 과거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 양자 간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다고 "납치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다뤄질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 사전회의 제네바서 열려'(4/11, 미국의 소리)

- 오는 5월1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사전회의가 열림.
- UPR 사전회의는 UPR을 앞두고 각국 대표단과 국가 인권기구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비정부기구인 UPR 인포가 주최한 이 회의에서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음.
-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반인도 범죄와 납치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고, 성분에 따른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들이 적절한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내외에서 자행되는 처형을 모두 중단하라고 권고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법



률이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함.

- **터키 한국팬클럽, 수도 앙카라서 북한인권 고발(4/13, 연합뉴스)**
  - 터키의 대표적 한국팬클럽인 '코리아팬스'가 12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함.
  - 이 단체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수용소에서 벌어진 참상 등을 고발하는 영상물도 터키어로 자막을 만들어 상영했음.
  - 힐미 케세빅 코리아팬스 대표는 개회사에서 "외국에 문을 닫고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벌어진 비참한 현실과 남북한의 차이를 강조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인류에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3. 탈북자

- **"탈북 여성 1명 태국서 미국 도착"(4/7,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서 인신매매 위기에 처했던 20대의 탈북 여성이 최근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망명 심사를 통과한 20대의 북한 난민 여성이 지난 5일 동남아시아 태국을 떠나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도착함.
  - 미국 내 탈북자인권단체 '재미탈북민연대'는 태국주재 유엔난민 시설에서 약 두 달간 조사를 받은 이 여성은 종착지인 미국에 도착해 가족친척과 상봉했다고 밝힘.
  - 단체 관계자는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태국 등 3국에서 보통 1~2년 넘게 조사를 받지만, 미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일단 북한출신이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짧아진다고 설명함.
- **하나원-경상대병원, 탈북자 의료지원 협약 체결(4/7, 뉴시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경상대학교 병원과 8일 오후 3시 경상대 병원에서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통일부는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건강 취약성을 감안해 민간협력을 통한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의료지원협약을 지속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함.



- '간첩사건' 증인 탈북자 "증언유출 수사해달라" 고소(4/7, 연합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함.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협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자 360명(4/8, 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올해 1분기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3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월별 입국자는 1월 153명, 2월 111명, 3월 96명임.
  -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는 2013년 319명, 2012년 352명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임.
  -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연말까지 입국 탈북자 수가 늘고 줄 수 있어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3월중 탈북난민 5명 추가 구출"(4/9, 미주중앙일보)
  - 북한인권협회의회의 '생명의 동아리프로젝트'가 지난 3월 중 추가로 5명의 탈북난민을 구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7명, 지난 2월에 5명의 재중 탈북난민을 구출한데 이어 지난 3월에 5명을 추가로 구출했다"고 밝힘.
  - 인권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번에 구출된 두 가족 중 한 가족은 2010년에 탈북한 3명(50대 부부와 24세 딸)이고, 다른 한 가족은 올해 초 탈북한 2명(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로서, 특히 이 모자는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어 어머니의 경우 발가락 두개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생명의 동아리 프로젝트'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민들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을 경유해 안전국가인 태국까지 인도함으로써 무사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구출활동을 하는 현지 선교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임.
  - 현재 인권협의회는 이렇게 인도된 탈북난민들이 캐나다행을 원할 경우 캐나다공관을 통해 이들을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서면계획서와 함께 건의한 상태임.

####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 한국 정부는 북·일 접촉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일간 협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노력 강화"(4/10, 미국의 소리)**
  - 일본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함.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9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후루야 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납북자 재조사 의향 전달...日 제재완화 검토"(4/10,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에 밝혔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5~6일 열린 외교 당국자 협의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런 의사를 밝힘.
  -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제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가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도항 금지'로, 신문은 북한이 재조사에 응하면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일본 측이 협의에서 밝히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또한 신문은 일본 측은 납치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한 조사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역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함.
  - 닛케이(日經)는 북한과 일본이 이달 중 다시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합의하는 절차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임.
- **"오바마, 日납북자 가족 면담 추진"(4/11, 연합뉴스)**
  - 산케이(産經)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할 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가족과 면담을 하도록 미국·일본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와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 등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 신문은 납치 피해자와 오바마 대통령의 면회를 통해 미·일 양국정부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함.

● '북-일, 이달 초 비공식 당국자 협의'(4/11, 미국의 소리)

-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조건부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응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시아 과장이 참석했지만 북한 측 참석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응할 뜻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북한과 비공식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1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강제 경매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연계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함.
- 이번 비공식 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 문제는 사법부 소관으로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의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북한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달 중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일, 이르면 이달 중 두 번째 정부 간 협상'(4/13, 연합뉴스)

- NHK는 북한과 일본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간 공식 협상을 다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함.
-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재조사 등을 거듭 압박할 방침이며 북한이 재조사를 받아들여 납북자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임.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2월 미-북 교역 전년 대비 급증...대부분 인도적 지원(4/8, 미국의 소리)**
  - 지난 2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1백2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힘.
  - 이는 6만2천 달러에 달했던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임.
  -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임.
  - 전체 수출액의 95%에 이르는 1백13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NAICS 990000)'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 해 2월에는 대북 수출로 잡힌 6만2천 달러가 모두 대북 지원 품목이었음.
  - 대신 지난해에는 1월에 대북 지원 품목이 88만 달러 수출됐지만, 올 1월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1월과 2월을 합하면 올해 미국 민간기구의 대북 지원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함.
  - 대북 지원 외에 지난 2월 미국의 대북 수출 실적은 미미한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NAICS 311615) 수출이 5만1천 달러, 신발류 (NAICS 316210)가 8천 달러, 플라스틱 제품(NAICS 326199)이 6천 달러에 그침.
  
- **유엔, 북 임신부에 25만달러 의료지원(4/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인구기금은 지난달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 북한 산모를 위한 응급약과 출산용품 등을 북한 내 30여 주요 보건시설에 지원했다고 밝힘.
  - 유엔인구기금의 아리에 허크만 북한 사무소장은 유엔 긴급구호기금으로 받은 25만 달러로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의 임신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며, 올해 북한에서 약 1만 8천 명의 북한 임신부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원품은 아기를 낳을 때 필요한 응급 처방약이나 출산 용품 등으로, 응급약과 여성위생품, 분만유도와 제왕절개술 안내책자, 산후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그리고 일회용주사기임.
  
- **정부,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4/9, 연합뉴스)**
  -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 '섬김'이 신청한 함경북도 나선 지역 산원(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기저귀, 기초 의료용품 등 1천700만원 어치 상당의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힘.
  - 올해 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총액은 19억5천만 원임.



- **미NGO, 180만 달러 대북 지원품 선적(4/1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아메리케어스(Americares)는 이번 주 내로 1만4천 파운드(약 6.4톤)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 의약품이 북한으로 선적된다고 밝혔다.
  - 항생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과 영유아 용품, 어린이 옷 등을 실은 이번 선적분은 미화로 180만 달러에 상당해, 대규모 대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지원은 북한에 6월 초에 도착돼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원품이 북한에 전달되면 평양과 황해북도의 6개의 병원과 진료소로 보내져 분배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도 아메리케어스가 지원하는 또 다른 37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들이 배송 중에 있으며, 4월 말께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지원품들은 소아용 영양 보충제, 의약품, 의료 기기 등임.
  
- **프NGO, 북 노인에 백만달러 식량지원(4/10,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H)는 지난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함.
  - 유럽연합 국제개발청(EuroAid)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00만 달러로 27개월 동안 '은퇴자시설에 사는 노인들의 식량문제 개선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함.
  - 우선 지원 대상은 조선노인연맹 중앙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18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천200여 노인들임.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공공배급체계의 붕괴로 도시 노동자들과 은퇴한 노인들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도움이 필요한 북한 노인의 규모가 약 315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음.
  - 한편,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함경남도 소흥시의 공중화장실과 학교의 세면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임.
  - 소흥 지역 정화시설 개선사업은 유럽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rm)의 홍콩지부가 기부한 약 26만 달러로 진행되며, 소흥시 주요 지역에 7개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30개의 학교화장실과 두 곳의 학교에 세면장을 건설 중임.
  
- **NGO, 북 200개 학교에 콩우유(4/11,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민간단체 퍼스트스텝스(First Steps) 대표단이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매일 콩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 보낸 콩과 미량영양소 등 지원품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원도와 평안남도의 대북 사업장에 분배감시단을 파견함.
  - 수잔 리치 대표는 지난해 말에 보낸 메주콩 100톤과 지난 3월에 도착한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340만 포의 분배를 확인하고 콩우유 생산현황도 점검했음.

- 또한 3명의 방문단은 선적된 물품을 확인한 후 강원도 원산, 통천, 남포, 형제산, 그리고 평안남도 덕천 지역의 고아원, 탁아소, 식료 공장, 그리고 진료소 등을 점검함.

● FAO, 북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4/11,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의 후안 루브로스 수의국 국장은 현재 35만에서 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대북 구제역 감염검사와 방지책 등을 포함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북한에 농장 내 안전과 차단방역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구제역 관련 도구들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구제역을 직접 퇴치 할 수 있는 백신도 제공할 계획임.
- 무엇보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샘플 표본을 채취해 '국제 연구소에 보내 바이러스의 표본을 알아내 북한에 맞춤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이 기구는 북한의 현재 발생한 구제역을 퇴치하고 앞으로의 추가 발생을 막기에는, 현재 목표액인 35-4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음.
-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주변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에 모금을 호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기구는 구제역이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악성 가축 전염병인 만큼 다른 주변국가들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8. 북한동향

-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발언(인도주의, 北 인권 등)에 대해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구조·송환'을 거론하며 '인권을 떠드는 남조선 괴뢰들의 인도주의의 진모를 드러낸 행위'라며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도 없다'고 비난(4.8, 중앙통신/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이나 있는가)

\*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행태'(김명옥 평천구역인민병원 과장) · "세상에 둘도 없는 천치이고 허수아비이며 악녀"(림창철 농업과학원 연구사)라고 대통령 실명 비난(4.8, 중앙통신/다 꿰진 창호지 구멍으로 누구를 흥 불 쬐인가)

- 우리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등 '北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민족반역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히스테리적 망동, 자가당착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4.9, 중앙통신)



\* 김봉남(노동자)·박미선(교원), 대통령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시 '북핵 및 北 경제난과 인권문제 지적' 등에 대해 실명거론 원색적 비난 지속(4.9, 중앙통신)

\* 염태성·박재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실장·부장) 등, '北 어선 나포·송환' 및 대통령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시 '對北 발언' 등 거론 비난(4.9, 평양방송)

● 최근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 발굴·공개 관련 "일본군 성노예범죄가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증거"라며 '과거청산은 북-일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4.9, 중앙통신·노동신문/법적,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